

종합

광주YMCA도
日 돕기 특별모금

광주YMCA가 일본 대지진 피해 특별 모금에 나선다. 특별 모금은 다음달 15일까지 1개월 간 펼쳐진다. 모금함은 금남로 본관을 비롯, 서구 문화센터와 광산구 청소년수련관, 하남지회,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강진 다산수련원 등에 설치된다.

모금된 후원금은 손전등과 건전지 등을 구입, 일본 현지에 보내는데 사용된다.

지진피해자들을 위한 추모기도회도 갖는다. 기도회는 일본에 지진이 발생한 지난 11일(금요일)을 기려, 다음달 15일까지 매주 금요일 금남로 본관에서 열린다.

YMCA 관계자는 “자매결연한 일본 요코하마YMCA와 함께, 지진 피해로 큰 어려움에 직면한 일본 국민들에게 도움이 손길을 보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모금접수는 계좌로도 가능하다. 광주은행 006-107-316375. 문의(062-234-0074).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日 애도 큰 마음에 감동
정신대 할머니들 돕자
시민 도움손길 잇따라

대지진으로 슬픔에 빠진 일본인들에게 위로와 애도를 표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감동을 받은 시민들이 도움을 손길을 보내고 있다.

18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 8일 만에 108명이 새롭게 회원으로 가입했다.

지난 2008년 12월 인터넷 카페(cafe.daum.net/1945-815)를 만들고 활동을 시작한 시민모임에는 현재까지 총 715명이 등록돼 있다.

방문자 수도 크게 늘어 매일 100명이 넘는 시민이 카페 홈페이지를 찾아 회원 가입 절차와 근로정신대를 도울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고 있다. 지난 2월15일 시작한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모금운동인 ‘10만 희망 릴레이’에도 지진 발생 이후 150명이 참여하는 등 침체된 모금운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모금운동에 참여하려면 동의서를 광주 서구 화정동 사무국으로 보내거나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문의(062)365-0815.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정승 농림 2차관 광주·전남 방문

정 승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이 19~20일 광주·전남을 방문한다.

정 차관은 19일 영암과 무안을 찾아 봄배추, 마늘, 양파 등 채소류 생산·저장현장을 둘러보고 농민들과 간담회를 한다. 20일에는 광주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에 들러 농수산물 가격동향을 점검한 뒤 상경한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금호타이어 노조 파업 결의

‘쟁의행위’ 78% 찬성...25일째 파업 여부 결정

사측 “매출손실 200억...단체교섭 요구는 불법”

워커아웃 중인 금호타이어의 노조가 지난해 체결한 단체협약을 거부하고 파업을 결의했다. 실제 파업 여부는 쟁의조정기간(24일)이 끝나는 25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7일 오전 5시30분부터 밤 11시30분까지 광주·곡성·평택공장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재직 조합원의 78.09%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날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3424명 가운데 3191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2674명(78.09%), 반대(기권·무효 포함) 514명(16.10%)으로 집계됐다.

노조의 파업 여부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기에 따라 25일째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노조는 ▲퇴직금 보전방안 ▲소음성 난청관결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식사고대수당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호봉 재조정(임금체계 조정) ▲타임오프 논의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재교섭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18일 오전 광주공장 복직동에서 파업 결의 기자회견을 열고 “금호타이어는 2009년 말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임금삭감과 정리해고, 근로자들의 명예퇴직 등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정년퇴직으로 인한 결원을 사측은 외주 인원으로 보충해 지난 9일부터 광주공장 생산라인에 투입했다”며 “이와 관

련해 노조는 사측을 업무 방해 혐의와 불법 파견 혐의로 각각 경찰과 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단협 위반에 대해서는 법률적 자문을 받아 고소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측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는 도급회 및 전환배치에 맞서 휴업금지, 근무조별 1시간 기계가동 중단 등 이미 불법 쟁의행위를 하고있다”면서 “매출손실액은 17일까지 20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사측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안은 퇴직금 보전 방안을 위해 작년 임단협 합의 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40% 상향하는 등 터무니없는 요구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이미 합의된 사항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노사가 지켜야 할 평화의무 위반으로 법률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軍비행장 이전 대책위 발대

민주당 광주시당은 18일 광산구 광산문화회관에서 민주당 광주 군용비행장 이전 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대책위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과 상임고문인 김동철·이용섭·조영택·김영진 국회의원, 민형배 광산구청장을 비롯한 대책위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안보리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결의
유엔 군사적 개입 승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7일(현지시간) 리비아 상공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리비아 내전에서 유엔의 군사적 개입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날 거부 표결에는 15개 이사국 가운데 미국·영국·프랑스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반대는 없었다. 중국,러시아,독일 등 5개국은 기권했다. 안보리 결의는 상임이사국 5개국의 반대 없이,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결의는 “리비아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리비아 상공에서의 모든 비행을 금지한다”면서 유엔 회원국들에 카다피군의 공격을 받고 있

는 민간인과 민간인 밀집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다만 리비아 영토 내에 외국군의 점령은 배제해 지상군 파견은 사실상 제외했다.

안보리가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의 제공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카다피군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리비아 내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되면 어떤 비행기도 이 지역을 통과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어기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또는 인근 국가 등 유엔이 지정한 군대가 이를 격추할 권리를 갖는다고 유엔 관계자는 설명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 의무를 이행할 계획이 있는 개별 국가나 국제기구들은 사전에 유엔 사무총장과 아랍연맹(AL)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결의는 또한 리비아내 모든 세력에 즉각적인 정전을 요구하면서, 카다피 정권에 대해 모든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안보리 결의 채택 수 시간 전에 카다피는 국영 TV 연설을 통해 “배신자들에게 자비는 없다”고 선언하면서 리비아 정부군에 반군 거점인 뱀가지 진격을 명령했다. 알자지라 TV는 수천 명의 뱀가지 주민들이 비행금지 구역 설정을 명기한 유엔 결의 통과를 축하하기 위해 거리로 몰려 나왔다고 전했다.

반면 안보리 표결 직전 카다피는 포르투갈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안보리는 권한이 없으며 그들의 결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만일 세계가 미친다면 우리 역시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층이하 신축 건물도 내진성능 강화

앞으로 2층 이하 소규모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성능 확보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내진설계 및 성능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강화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3층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13m 이상 등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고, 전체 건축물의 84%를 차지하는 2층 이하는 별도 기준 없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1~2층의 저층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지는 않는 대신 별도의 표준 설계도면을 만들어 이 기준에 따라 신축을 의무화하는 일본식 내진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일본은 현재 2층 이상이거나 200㎡ 이상 건축물

의 경우 건축구조 기술사가 참여하는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으며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1층, 200㎡ 미만 건축물은 별도로 정한 구조기준에 따라 건물을 시공하도록 하고 건축구조전문관람 자격자의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2층 이하 건축물을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건축비가 종전보다 3~5% 가량 상승하고 설계 단계에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의 참여, 건축기간 지연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표준설계 도면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표준설계도면을 활용하면 구조 전문가의 도움 없이 내진성능을 보강할 수 있고 건축비도 종전보다 1% 정도 증가하는 선에서 신축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또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내진설계에 참여하도록 한 범위를 현행 6층 이상에서 3층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시설

영광 원전 안전성 부실, 대비책 서둘러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유출 공포가 확산되면서 영광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영광 원전이 이중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어 후쿠시마 원전보다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내진설계가 더 약해 대지진과 같은 비상사태가 온다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 영광 원전에 체계적인 방재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도 큰 문제다. 지진 등으로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피로가 협소해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접적인 피해지역인 원전 반경 5km에는 현재 3개 읍·면에 1만4975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비상시 이들이 탈출할 도피로인 원전에서 흉능을 사거리까지 7.1km는 2차로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이 구간은 출퇴근시간에 교통이 혼잡한 곳으로 원전사고 발생시

탈출이 불가능해 막대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원전 안전교육을 담당할 인력도 태부족한 상태다. 영광에서는 7년 전부터 원전사고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해 매년 두 차례씩 방재훈련을 실시하고, 4년 단위로 전 주민이 참여하는 대피훈련을 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훈련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 지적이다.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에 비추어 영광 원전의 안전성 결여는 자칫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가 영광 원전을 비롯한 국내 원전의 안전성향에 대해 총체적인 보완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내진 설계가 취약한 만큼 지진 감시 강화는 물론 대피로 확장과 안전교육 인력 확보 등 대비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원전사고에 ‘사후약방문’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겉도는 ‘그린푸드존’ 위협받는 어린이 건강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2년 전부터 시행해온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그린푸드존)’ 제도가 겉돌고 있다고 한다. ‘그린푸드존’은 학교 주변 200m 이내 업소에서 정서 저해식품 및 불량식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09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본보 취재 결과 광주 시내 일부 초등학교 앞 문방구 등에서는 원산지 불분명한 재료로 만든 간식류는 물론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해로운 합성착색료를 다량 함유한 과자류를 버젓이 팔고 있다. 특히 불법으로, 그것도 불결한 환경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업소까지 있었다.

더욱이 서구의 한 초등학교 부근 문방구에 진열된 과자는 대부분이 중국산이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심지어 칠레산까지 있었다. 유통기한도 대부분 2년 이상 남아 제조일자 와 원산지 표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린푸드존’은 있으나 마나 한 겉치레 홍보용으로 전락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이 학교 주변 먹을거리가 심각한 위험을 받고 있는데도 정작 당국은 뒷맛만 지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시는 매일 2차로 130명의 단속원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그린푸드존’ 내 1만 344개 업소를 점검해 5개 업소만을 적발, 행정조치했다. 단속이 형식에 그쳤거나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지 않았다면 실상과는 전혀 다른 이런 결과는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시행된 지 3년이 넘도록 식품안전보호구역이 허구에 그친다면 어린이 건강을 보장할 수 없다. 지자체와 학교 당국은 계도와 함께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성장기 어린이들을 불량식품으로부터 지켜내야 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올해가 마지막 기회”

박지원 원내대표, 전남도교육청서 특강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 해 조건없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으며,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전남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왜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지금도 남북정상회담의 끈을 놓지 않고 남북간 대화를 계속 하고 있는데 대해 이 대통령의 충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그는 “만시지탄이지만 집권 4년차인 올해가 남북정상회담의 적기이기도 하다”며 “이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귀를 불리고 핵을 폐기해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UAE(아랍에미리트) 유전개발 참여를 성사시킨 끈기와 집요함으로 끝까지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남북 정상간 합의가 이뤄지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2년 정도

의 시간이 생긴다. 민주당도 열심히 도울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경제, 핵문제를 해결한 성공한 대통령, 분단국가의 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같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사 화산 문제 협의를 납축에 제의해온데 대해 “우리 정부가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것은 잘한 일”이라며 “일본 지진과 원전폭발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북한과 공동으로 핵무사에 관측소를 설치, 공동연구를 시작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핵의 폐기를 즉각 수용해 남북정상회담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경제형성상 전면전은 불가능하지만 국지전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며 “북한의 잇단 핵의 폐기를 즉각 수용, 식량 지원,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성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적극적 노력과 미국, 일본 정부의 변화로 희망의 물결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는 이뤄지리라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중두



여기도 걱정... 저기도 걱정...

Table with 2 columns: 광주日報 (G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t list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office details for both the Korean and English editions.